

與 ‘민생’ 행보 본격화… “보여주기 아닌 구체적 성과 창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당내 민생희망특별위 구성 의결
김기현 지도부, 전국투어 예정
“특위, 민생 해결사 역할 할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생’ 행보를 본격화한다. 집권당인 만큼 정부와 함께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 공세에 집중하는 것과 비교해 민생 행보로 차별화를 노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하락세인 당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0일 당내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가 취임 후 민생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만큼 관련 행보도 본격화한 것이다. 민생특위 위원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특위 구성과 관련해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보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특위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위 위원도 지역·분야별 대표성,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조수진 최고위원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생산적 경쟁’을 해야 할 것은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역별 역동적인 당내 인사, 현장 목소

리를 들려줄 신선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구성한 특위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도 경청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청취한 민심에 바탕해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가 ▲고금리 ▲청년 일자리 ▲대학생 급식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 지목한 것을 바탕해

구체적인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21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찾는다. 이달 말 출시되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문제로 비판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문제를 당 차원에서 미리 점검해 대응할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민생특위 활동에 발맞춰 전국투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현장 민심을 듣고 정책 대안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첫 현장 최고위는 오는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으로 인한 논란을 잠재우는

한편 오는 4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비한 행보이기도 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내린 37.0%, 더불어민주당은 3.8%포인트 오른 46.4%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대표도 ‘김 최고위원 5·18 발언으로 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주된 원인이었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이) 순수하게 개인적 발언이었다는 본인 설명과 함께 사과도 했다. 우리 당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재차 해명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물밑경쟁 ‘치열’

천명계-비명계 간 대리전 양상
안규백, 홍익표, 이원욱 등 하마평

‘윤 대통령 직할 체제’를 구축한 여당과 각종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당을 결속시켜 내년에 있을 총선을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당규에 따라 지난해 3월 당선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초까지로, 5월 둘째주에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민주당은 곧 원내대표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일, 선거인명부 작성 등 제반 작업에 착수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초에 종료되기 때문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출범을 같이 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좀 더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다.

현재 원내대표 후보군은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홍익표·이원욱·박광온·윤관석·김경협 의원,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자전다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유력 원내대표 주자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3선)은 원내대표 이외의 자기 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할을 찾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는 친이재명계와 이 대표가 단계적으로 퇴진해야 한다는 비이재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장 총선을 치러야 하는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 대리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만큼 이 대표와 각을 세우는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주자다. 언론인 출신인 박광온 의원은 ‘명낙대전’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결선투표에 오른 인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가깝다.

홍익표 의원은 친이재명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에서 만 3선을 한 홍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합지인 서초에 출마하기로 해 ‘도전과 희생’이란 이미지도 얻었다. 홍 의원은 당내 주요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이면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민평련 소속 의원실 보좌직원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외부적으로 비춰지기는 자율투표 같지만, 계파 결속을 통한 특정 후보 밀어주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민평련 안에도 친이재명계 의원과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있는 만큼 과거처럼 계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가 홍 의원과 박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라며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도 비명계 사이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일협력, 국민 체감 가능한 후속조치 만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취임 첫 일본 방문 등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을 국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보안을 지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추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윤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및 협력에 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등 부정적인 여론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전을 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각부처에서, 정치권에서, 경제·산업계와 미래세대에서 여러 가지 교류·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미리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한일정상회담 당시 위안부·독도 문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안 됐다고 명확히 말했다”며 특히 “수산물 수입제한 철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명확하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선거제 개편안,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책”

‘정치개혁 2050’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해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모인 청년 정치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유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개혁2050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 밖에



청년 정치 모임이 ‘정치개혁2050’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위에서 제출한 선거제 개편 3개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태홍 기자

김기현, 김진표 예방… 연대·포용 공감

〈국민의힘 당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립과 갈등이 무척 증폭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김 대표가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 책임감 등을 밝혀줄 것으로 보고 기대가 크다”며 야당과의 연대·포용을 당부했다.

김 대표는 취임 후 김진표 의장을 첫 접견한 자리에서 “요즘 국회가 대립적 갈등이 커진다는 국민적 우려가 많다.

그런 만큼 가치나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국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적을 향해 간다는 인식만 함께한다면 연대와 대화, 포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김 대표를 만난 가운데 “우리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 국회에 필요한 것은 연대와 포용”이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야당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고, 저하고도 자주 보고 국회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 내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김 의장 당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원내대표를 1년 동안 할 때, 양당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진행했던 게 대부분이었다. 당 대표를 하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